

북핵문제 : 기원, 의도 그리고 향방

윤 덕 민*

I. 서론

북핵문제는 이솝우화중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무료한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듭 거짓말을 하지만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두 번 속은 마을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3번 국제사회를 크게 속였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조약」,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1994년 「미북 제네바 포괄합의」 등 3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에 대해 핵무기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은 합의 때마다 상당한 대가를 챙겼다. 1985년 NPT가입시에는 소련으로부터 MIG23 전투기 등 최신무기를 받았다. 1992년 비핵화선언의 경우에는 남한으로부터 미전술핵 철수와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을 얻었다. 그리고 1994년의 제네바합의 때에는 100만kw 경수로 2기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중유50만톤 그리고 대사급 미북관계개선,

경제규제완화 등 북한체제생존의 로드맵을 얻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의 김일성은 1990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가네마루 부총리(당시)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1992년 2월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정원식 총리에게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무성의 켈리 동아태 차관보는 강석주 외교부부부장으로부터 우라늄농축계획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지만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이를 부정했지만,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였고, 2006년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핵실험은 핵무기 보유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개적 방법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보유국가(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얻는 것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 필요하지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핵클럽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북한은 세계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8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핵무기를 포기한 남아공을 제외하면 9번째 핵보유국가 되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무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본고는 우선 핵실험의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로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내논의와 시각들을 정리하여 문제의 기원을 밝혀보며, 셋째로 국제사회가 왜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실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끝으로 북한의 협상행태를 분석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핵실험의 의미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정권 나름대로의 매우 치밀한 계산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핵실험 3달전 북한은 각종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시위를 하였다. 국제사회의 주목은 대포동2호 발사에 모여 있었지만, 나머지 6발의 미사일시위가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대포동2호 발사여부에 쏠려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부대는 심야에 강원도 깃대령에 나타나 이동발사대를 활용하여 스커드, 노동 등 각종 미사일의 발사시위를 기습적으로 감행하였다. 발사진전 두동강이 나 실패한 대포동2호와는 달리, 이들 미사일은 상당한 정확성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부대는 이동발사대를 활용, 높은 기동성과 위성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야간 발사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미사일전력이 실전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이론적으로 북한내 도로 어디에서나 서울, 동경, 북경을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 직전에 북한은 중국측에게 4kt급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핵실험은 예외 없이 10~20kt급의 폭발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북한측이 4kt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핵폭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진전된 기술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본다. 결국 미사일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핵억지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북한은 실험을 감행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 이래 보관중인 연료봉의 재처리(핵폭탄 5~6개분의 플루토늄 추가), 핵보유선언, 대포동2호 발사 등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취하여 왔지만, 부시정부는 군사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동에 함몰된 부시정부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실험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부시정부의 레드라인은 핵이전(transfer)이라는 점을 간파했다고 본다.

중국도 일단 크게 화를 내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중국은 핵보다는

지정학적 파장을 우려하는 쪽에서 정책방향을 취할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했을 것이다.

핵실험시 유엔의 제재 가능성도 있지만 인도-파키스탄의 예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호지부지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1~2년 동안 고난의 강행군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북한정권은 핵실험의 단행을 결정했을 것으로 본다.

Ⅲ. 북핵문제의 기원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북핵문제의 기원을 둘러싸고 한국전쟁의 기원만큼이나 많은 설들이 대두되었다. 조작설, 과장설을 거쳐 미국책임론에 이어 미북 상호신뢰부족에 따른 양자 책임론까지 대두되었다. 또한 핵무기 개발 이유를 두고도 체제생존을 위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한다는 설로부터 협상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설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우선 조작설 내지는 과장설은 사실 비슷한 논리의 구조를 갖는다. 1990년대 초 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국사회에서는 조작설 내지는 과장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적이 있었다. 앞서 김일성의 부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설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으며 북한 핵문제는 서방측에서 조작한 것이다. 그 근거로서 북한이 처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급할 수 있는 우라늄 자원을 이용하는 핵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개발에 적극성을

펼 수 있으며, 북한의 낮은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핵무기개발 능력은 없고 영변의 재처리시설 등은 서방을 속이기 위한 위장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심지어 냉전종결로 적이 없어진 미국의 CIA나 국방성이 북한의 핵개발을 과장, 새로운 적으로 조작하여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유지하려한다는 시각조차도 대두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중립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에 걸친 객관적인 북한핵시설에 대한 사찰과정을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가장 난관이자 핵심적인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와 관련 북한이 NPT를 탈퇴하게 됨으로써, 조작설과 과장설은 그 힘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조작설은 2002년 10월이후 다시 한국사회에서 힘을 얻는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과 관련, 미국의 조작 내지는 과장설이 제기된다. 당시 주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선·미선양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이 폭발하는 가운데, 북한이 우라늄농축과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는 조작으로 믿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부시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따른 일북관계개선 움직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견제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한 때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개진되기도 했다.

둘째, 미국책임론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 진술로 HEU를 통한 핵무기개발이 사실로 드러나고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작설은 슬그머니 미국 책임론으로 바뀌

게 된다. 부시정부가 양자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한을 압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2년 10월이후 우라늄농축과 핵무기보유를 미국의 켈리 차관보에게 시인한 이래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더한 것도 가지려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북한이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설이 전개되었다.

셋째, 미북 책임론은 양비론적 시각이다. 미국과 북한사이의 상호신뢰부족으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의 적지않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상호신뢰부족을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둘러싸고 협상용이나 아니면 핵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관한 오랜 논쟁이 있다. 우선 협상용이라는 설에 따르면,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생존에 필요한 반대급부를 얻기위한 협상용으로 적당한 보상을 얻는다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핵협상은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핵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와 북한사이에 진행되어온 지난 20년간의 협상역사를 분석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현실의 문제이며 진행중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미북간의 상호신뢰부족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

속하고 있는가? 단순히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지난 20년의 협상기록은 북한이 오랫동안 그리고 매우 일관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기원과 관련한 논란을 무의미하게 한다.

북한은 왜 핵무장에 집착했는가?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다는 북한의 선전에 너무 익숙해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 때문이기에 앞서 한국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의 개입으로 적화를 이루지 못한 한국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미국의 개입을 막기위해 해외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의 꿈을 북한정권에 갖게 하였다. 1950년대부터 원자력을 육성해온 북한의 대야망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이었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한민국의 성공에 따른 산물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에 대해 3가지 신화를 갖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통성의 측면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조선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 신화들은 차례 차례로 깨진다.

우선,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조차 극찬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제3세계 경제발전의 모범사례였던 북한의 주체 경제체제는 197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신식민지종속경제에 추월당한다. 1990년대 들어서는 그 격차가 2~30배에 달하게 된다. 둘째로 군사적 우위의 신화 또한 붕괴되었다. 인민군은 한국전쟁 당시 단 3일만에 국군을 와해시킨 바 있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도저히 북한은 재래식 군비측면에서 남한과

군사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총 GNP보다 2배 이상 크다고 본다. 끝으로 북한의 정치적 우월성 신화도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로 여지없이 붕괴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사회주의권이 도미노처럼 붕괴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였던 동맹국들조차 한국의 경제력에 끌려 북한을 버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1990년 9월 한국과의 수교를 통보하러 평양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에게 김영남 외상(당시)은 한소수교에는 핵무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 16년만에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무장을 공식화하였다.

남북간의 정치경제군사적 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사회주의권이 연일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이 자신을 버리는 가운데, 북한정권은 핵무장만이 흡수통일을 막고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굳혀갔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지난 20여 년간의 핵협상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국제사회와 북한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담은 세 차례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1985년의 핵확산금지조약, 1992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1994년의 미북제네바합의이다. 각각의 합의에서 북한은 상당한 대가를 쟁겼지만 결국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백만 단위의 주민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북한정권은 상당한 현금으로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을 사오고 있었다.

IV. 실패의 원인 : 왜 핵무장을 막지 못했는가?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철저히 실패한 체제인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절박성을 가졌던 반면, 이에 대처하는 국제사회는 그 정도의 절박성을 가지지 못했다.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했다. 하나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을 포기하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어느 쪽도 확실하게 북한을 인식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실패의 근본적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오는 심각한 안보상의 파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해결보다 남북관계를 우선하여 왔다. 1993년 북한의 NPT탈퇴 사태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사실상 북핵관련 협상권을 미국에게 일임하였다. 미북직접협상을 계기로 핵문제는 미국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싹트기 시작한다. 미북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사회는 북핵문제는 미국의 문제라는 착시현상에 빠지게 되었고 제3자적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보게 된다. 북핵문제가 미국의 문제로 정리된 이상, 북핵의 심각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심리상태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한 미국은 한국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보였다.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 한미간에는 분명한 온도차의 차이

가 있다. 소수의 핵무기라도 한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반면, 미국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동아시아라는 큰 호수에서 북한은 올챙이이다. 말썽많은 올챙이 덕택에 큰 물고기들이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 머리가 커진 중국도,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일본과 한국도 말썽을 피우는 북한으로 인하여 미국주도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제한적이고 해외로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이전(transfer)하지 않는다면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질서에 있어서의 주도력을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은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중동의 새로운 질서창출에 골몰한다. 북한이 재처리를 하여 5~6개 핵무기수를 늘려도, 핵무기보유를 선언해도 부시정부는 중동에 함몰되어 금융조치 외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부시정권의 입장에서는 수렴화하는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2차적 과제였던 셈이다. 9·11테러이후 미국은 완전히 중동에 함몰되고 중국에 북핵문제 해결을 거의 일임한다. 중국은 사실 북핵문제의 주요행위자(major player)가 아니었다. 2차 핵위기가 터지자 북핵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인 것은 미국이다. 북한은 지정적으로 중국의 영역이고 핵무장시 미국도 곤란하지만 더 큰 타격을 받는 존재는 중국이라는 인식하에서 부시정부는 북핵문제를 사실상 중국에게 맡겼다.

그러나 미국이 의도한 대로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 핵무장시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핵의 근본적 해결보다 6자회

담 개최국으로서 그리고 중재자로서 지역질서의 주도적 역할을 즐기고만 있었다. 작년 가을이후 BDA사건이 터지면서 북한문제가 자신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게된 직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이미 시기를 노치고 말았다. 중국 최고지도층의 강력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일본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한 때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해결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우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북수교에의 열망은 납치문제로 대체된다. 일본은 북핵보다 납치문제를 우선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북한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일본의 중재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북핵문제의 리비아식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본의 역할에 따라서는 기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납치문제는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버렸다.

V. 북한의 의도

1980년대 중반이후 남북간 경제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한국의 북방외교로 소련, 중국 등 동맹국들의 대한 접근이 적극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영변핵시설에 5MW 원자로와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여 명백한 핵무기 개발의 길을 보인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공산권이 붕괴되고 한국의 공세적 북방외교로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서

는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핵무장이다. 핵무기는 남북간의 불리한 군사균형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카드를 강화시켜줌으로써 북한정권에게 생존의 정치적·심리적 안전판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대미관계개선은 흡수통일을 꾀하는 한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소련(러시아) 등 동맹국들의 대남 접근으로 인한 불안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결국 핵무장은 북한정권에게 그 자체가 체제생존을 위한 목표이자 또 다른 목표인 대미 관계개선을 이루는 협상 지렛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협상행태를 보면 매우 일관적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미국과의 직접적인 담판을 피하였다는 점이다. 협상대상이 한국도 중국도 아니고 오직 미국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 타결이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1차 핵위기사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국과 IAEA를 제쳐놓고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했으며, 2차 핵위기사 지속적으로 미북 양자대화를 요구하였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단계 타협, 즉 필요한 최소한의 핵억제력(minimum deterrence)은 인정받는 대신에 미국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한다는 선에서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한다. 최소한의 억제력을 인정해준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확산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중거리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거리가 포함된 것은 아마도 일본을 배려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지만 테러리스트나 제3국에 절대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transfer)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측 인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 있으며 미국의 좋은 맹방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셋째, 자신의 요구사항을 응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의 양산체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행해갈 것임을 위협하면서 극한 전략을 취하였다. 이와 관련 핵연료봉의 일방적 인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연료봉의 재처리 등 필요이상의 모험을 강행하는 극한전략을 취하여, 미국에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넷째, 핵무기 개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하여 에너지, 식량 등 경제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활용하여 왔다.

결국 결국 일정한 수준의 핵무장(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을 미국이 묵인해준다면 절대로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지난 15년 가까이 일관되게 모색하고 있는 북한식 해결의 골자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거의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려 했다. 제네바합의로 북핵활동을 동결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으로 미사일협정을 맺으려는 순간 'born again Christian'인 부시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의 꿈은 실현 직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핵실험이후 고난의 강행군을 통해 1~2년 버티다 보면 미국의 신정부가 나오

고 그 정부와 정치적 타협을 하려는 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VI. 결 어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선군 체제의 강력한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핵무장을 수용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실험직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기관들도 오랜 지원에 따른 피로와 함께 핵실험 여파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 식량지원 감소와 수해 등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기근 재발이 우려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정권은 권력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막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해갈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직후 북한 붕괴론이 회자되던 적이 있다. 극심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는 붕괴하지 않았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은 일반적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체제 내구성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것은 체제의 특수성과 함께 한국,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공히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북 제네바합의도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막기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후 주변국들의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네오콘들 사이에 국한되던 '체제의 변화없이는 핵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한반도의 위기관리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10년전 1차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북한사회 및 경제는 대외환경에 보다 취약한 상황이다. 북한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이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경제 또한 대외지원에 대한 의존이 1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다. 철저히 실패한 '신정독재체제' (神政獨裁體制)를 핵무기로 유지하려는 북한과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운명은 19세기적 상황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 소위 한반도 주변 4강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핵실험으로 북한문제는 지정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사활적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문제로 비화하였다.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하면 할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우려가 있다.

북핵실험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1718호에서 보듯이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강력히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통보하여 왔다. 국제사회가 여하히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에 대한 대처를 일관되게 할 수 있는냐가 문제해결

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핵무장은 절대 막겠다는 우리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성이다. 북한이 우리의 정책의지를 의심한다면, 핵무장을 막을 수 없

을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외교**